

이덕일의 '역사의 창'



과거는 흘러갔건만...

수주대토(守株待兔)라는 말이 있다.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한 농부가 밭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리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농부는 그때부터 일손을 놓고 토끼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으나 토끼는 다시 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한비자(韓非子)' '오두(五蠹)'편에 나온다.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제자백가 중의 법가(法家)가 유가(儒家)를 비판하는 정치 풍자였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戰國)시대 한(韓)나라의 공자(公子) 한비(韓非:서기전 281~서기전 233)와 그 제자들이 편찬한 정치철학서인데, '오두'편은 한비가 직접 저술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진시황이 유학서를 불태우고 유학자를 물어 죽인 분서갱유(焚書坑儒)와도 관련이 있다. 진시황이 사상 최초로 중원을 통일한지 8년째 되는 서기전 213년, 조희 석상에서 유가(儒家)인 박사 손우월(淳于越)이 고대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를 본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가(法家)인 승상 이사(李斯)는 '3대를 본받을 것이 없다'고 반대했다. 이사는 "지금 여러 유생들은 지금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옛 것을 가지고 지금의 세상을 비난하면서 백성을 현혹해서 어지럽히고 있습니다"고 비판했다. 유가들이 과거가 좋았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정치를 비판한다는 비난이었다.

이사는 진(秦)나라 기록이 아닌 것은 모두 불태우고, 시(詩:시경)와 서(書:서경) 같은 유학서들도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사는 서로 마주하고 시와 서를 말하는 자는 저잣거리에서 목을 베는 기시(棄市)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시황은 이사의 건의를 받아 의약(醫藥), 점복(占卜), 농업(農業)에 관한 책만 민간이 갖고 있을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불태워 버리는 분서를 단행했다.

이듬해에는 진의 수도인 함양(咸陽) 유생들이 요상한 말로 백성들을 어지럽힌다는 고발이 들어오자 진시황은 어사를 시켜서 심문하게 했다. 서로 고발하면서 형을 면제 받으려는 유생이 460여 명이었는데, 진시황은 구덩이를 파서 물어 죽이고 천하에 이를 알렸다. 진시황은 기나긴 전쟁을 끝내고 평화시대를 만든 자신의 치세가 가장 살기 좋은 때인데도 유생들이 이미 지나간 삼대를 빗대 현재를 비난한다는 것이었다.

토끼가 와서 그루터기에 부딪쳐 죽는 것은 다시 오지 않을 과거인데도 유학자들은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꿈꾼다는 비웃음이 날은 고사성어가 수주대토다. 수주대토로 유가를 비판하고 법가를 옹호한 한비자가 같은 법가인 이사(李斯)의 계약에 몰려 옥중에서 자결한 것은 권력의 비정함과 무성함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얼마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건국전쟁'을 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이 심각한 중병에 들었다는 사실을 다시 절감했다. 일제 통치 때가 좋았다는 뉴라이트 출신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앙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승만은 과연 독립운동가였나를 돌아보게 만든다. 영화에서 CIA 출신 인사가 백범 김구 선생이 남북협상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도 생각해 두었다.

유럽의 나치잔당 처벌법이 절로 생각났다. 현 정권이 국민적 심판을 받은 핵심 이유도 일제 때가 좋았다는 뉴라이트 세력들을 정권의 이념가로 삼아서 흥분도 장군을 내모는 것으로 항일 독립전쟁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친일세력을 다시 우리 사회의 주류로 만든 이후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권력을 지배해왔지만 역사적 정통성만은 백범 김구로 대표되는 항일세력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박한 역사인식이었다. 친일·독재·부정부패·무능으로 점철되었던 이승만 집권기를 호시절로 호도하려는 정치·경제·사회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는 이 현실은 한 역사학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역사에게 묻게 한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성공을 위하여



정명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추진위원장 광주보훈병원 심혈관센터 부장

라 동남아로 진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오송과 대구에 집중돼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호남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지난 17년 동안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추진해왔다.

2023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000억여원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호남지역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고급 연구인력의 양성이다. 광주-전남에서 심혈관계 분야를 연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외부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력을 영입해야 한다. 특히 우리 지역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등에서 심혈관계 분야 전공 학생들을 위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해 젊은 의사들을 양성해야 한다.

둘째, 향후 연구병원 설립을 추진해 점진적으로 연구병상을 늘려가면서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심혈관계 기초분야에서 연구한 새로운 약제와 의로기기를 임상에서 환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개연구센터와 연구병원의 설립이 절실하다. 기초 연구소와 임상 병원이 병행해서 설립되어야 기초 연구가 활성화되고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국립심뇌혈관센터 주변에 좋은 연구소와 의학

품·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다. 기초 및 임상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립심뇌혈관센터와 함께 산업체의 연구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 업체를 유치해 함께 발전해야 한다.

넷째, 국내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국립심뇌혈관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초연구를 활성화 하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연구 분야를 부각하면서 국제적인 공조를 이룩해 가는 것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정부 여건 조성이다. 좋은 환경의 주택단지, 우수한 중·고교 및 대학, 백화점 혹은 대형 쇼핑몰과 같은 편의 시설, 공항 및 철도와 같은 교통 접근성 등을 확보해 국립심뇌혈관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과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설립·완공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유치되면 지역 환자뿐만 아니라 전국 혹은 해외에서 환자들이 찾아와 광주-전남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세계적인 심혈관계 연구를 통해 노벨상에 도전하고 의료산업 부흥을 꾀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연구를 기반으로 언젠가는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광주-전남에서 배출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인체에 가장 중요한 심혈관계를 치료하고 연구하는 센터가 광주-전남에 들어서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재난·사고에 든든한 광주시민안전보험



윤건열 광주시 안전정책관

서 서로를 돕는 것에서부터 유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보험의 정의를 보면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 공동으로 재산을 마련하고 그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정해진 돈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험은 기원전 30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의 국가 형성과 함께 시작했다. 동서 간 무역거래가 활발한 상인들 사이에서 오늘날의 손해보험 형태로 이뤄졌다. 그러다가 산업화와 개인주의가 진행되면서 공동체 안의 상호부조는 점차 사라지고 이 빈자리를 보험회사가 자리하게 됐다. 통계와 수학을 활용하는 현대적 의미의 보험은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입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 가입하는 개인보험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보험으로 나뉜다.

광주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 시민안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자전거 안전보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이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보험 수급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반해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며 시민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

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하루에도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문의를 한다. 보장항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도 있다.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지급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여기에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개인이 들고 있는 타 보험의 보험금 지급과 관계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과 상해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이며 역사 사고 사망, 스포츠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개물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 실적과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분석해 보장항목을 확대하거나 재조정했으며 보장금액을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시민 모두가 안전사고 없는 일상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보험 삼아서'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다. 일어나지 않을 바리장한 흑시 모를 상황 등을 대비해 두는 경우다. 그런데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누군가 지원해 주는 뒷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社說

교통대책 없이 복합쇼핑몰 성공도 없다

'꿀잼 도시'를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주 '복합쇼핑몰 3종' 사업의 성공 여부는 교통대책에 달려 있다. 교통대책이 없다면 사업은 광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운석열 정부가 광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관심을 보인 끝에 추진이 결정됐다.

그러나 교통 해소대책 없이는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하는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더현대 광주'와 광주신세계(확장)가 들어서는 광천동 사거리와 임동 오거리 일대는 지금도 광주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다. 광천동 사거리의 경우 하루 교통량 12만대인데 광주신세계가 규모를 3배로 확장해 2028년 개장하면 하루 24만대로 늘어났다. 임동 오거리도 광주 50개 교차로 가운데 교통량 증가율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차량 통행이 많은데 '더현대 서울'의 1.5배 크기인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면 교통 지옥은 불보듯 뻔하다.

여기에 2030년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 광주'까지 문을 열면 광주는 임동

오거리-광천 사거리-무진대로로 이어지는 교통 지옥 라인이 형성된다. 광주시는 교통 대책의 하나로 상무역에서 시청-광천터미널-광주역까지 7km 구간에 지하철도를 신설할 계획인데 예상 사업비 6000억원을 복합쇼핑몰 개점 전에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업비의 60%는 국비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줘야 한다. 복합쇼핑몰이 민간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주변 교통인프라는 공공 영역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또다른 대책의 하나로 더현대광주와 광주신세계 일대를 보행자 중심도로로 바꿔 차량 이용자들의 접근 자체를 불편하게 하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대책이다. 쇼핑객들에게 걸어들어가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아무튼 지하철 외에도 도심 급행버스 등 다양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부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공론화가 먼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가 접수됐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데다 조례 폐지를 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결정에 앞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요구하는 주민 청구서명인 명부가 시의회에 제출됐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 서명 기간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지난 19일까지로, 총 1만366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해 청구인 명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검증 절차 이후에도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청구인 명부 검토 작업에 벌이고 있는데 일부 서류에 주소가 모호하게 적혀있는 등 오류가 있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조례 유효성을 당론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원이 시의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인권조례가 교사 권한을 축소해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의견을 모으는 데 있어 공청회나 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청구한 조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 평화의 도시이자 혁신적인 도시인 광주시가 학생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만든 학생인권 조례인 만큼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폐지해야 한다면 제정 때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처사다.

無等鼓

아름다운 버드나무를 베어내고 운동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공무원들 앞에서 그는 김수영의 시 '풀'을 낭독했다. 생태·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생각을 살려 묻고 기와 새들의 천국,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자 설득했다. 그가 지켜낸 여의도 셋방생대공원은 30여년이 지난 지금,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수달이 사는 도시민의 휴식처가 됐다.

'한국 조정의 대모'로 불리는 정영선(83)을 만나는 다큐멘터리 영화 '땅에 쓰

유는 환자와 보호자가 숨어 올 수 있는 곳, 지친 의사와 간호사가 쉬어갈 수 있는 위안의 장소들 만들어 주고 싶어서였다.

그의 조정관은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의 '검이불루화이불치(儉而不陋華而不侈)'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산천은 신이 내린 정원이자 천국"이라 생각하는 그는 아파트 난개발로 전통의 아름다움이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그래서 손자와 함께 구근을 심으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몽골하다.

'땅에 쓰는 시'

'아무데나 피어도/ 생을 잃는 경험이었다. 사 계절 변화에 따라 선유도 공원, 서울올림픽 조각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 경춘선 숲길 등 그의 작품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다보면 '사색의 정원'에 앉아 있는 기분도 들었다. 포함 바닷가 주택 정원을 조성할 때는 나희덕의 시 '여, 라는 말'이 떠올랐다는 대목을 기억했다 시인의 시를 찾아 읽기도 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서울 아산병원.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고 지상에 수많은 나무를 심어 작은 인공 숲을 조성한 이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주국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